

도의회 “전개공 사장 임명 철회를”

국주영은 의장 “의회 경시 과오 바로잡을 것”… 도의원들, 5분 발언 통해 촉구

김성수 도의원, 전개공 사장 소유 부동산 문제 제기… 김 지사 “정확히 알지 못해”

김관영 도지사의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 전북도의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396회 정례회 개회식이 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먼저, 국주영은 의장은 “의회주의자리는 김관영 도지사가 자료제출 거부로 인사청문회가 중단된 시기에가 벌어졌는데 절차가 잘못됐다며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이다”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의회를 경시한 과오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도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김관영 지사에게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북도의회가 전북 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중단하면서까지 강도 높은 부적격 의사를 표명했는데 지사는 절차적 하자를 거론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는 나를 따르라는 식의 시대착오적 리더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민생일치로 부적격을 드러낸 후보자를 응호하고 도의회를 상대로 억지스러운 역공을 펼치는 도지사의 논리는 용색하기만 한다”며 “심지어 사설관계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했다.

오은미 의원은 “김관영 지사가 협치와 소통 행정을 주장했으나 인수위 시절부터 만나는 인사, 단체를 보면 전

반적인 소통이 아니라 편향 소통이었다”면서 “국가예산 확보를 명분으로 기준과 원칙 없는 명예민증 낭비, 전략적 외부 인사 영입, 새만금과 군산, 기업유치 외에는 무관심 등 도정 운영이 과거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강행했던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은 도의회와 도민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김관영 지사는 의회와 도민을 무시하고 묵살했다. 의회와 도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영국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많은 도민들도 임명되기를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인사의 임명을 감행

한 것은 불공정을 시작하겠다는 선전 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의회와 소통이 없다는 것은 도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불통행정이다”고 규정했다.

김급 현안질의에 나선 김성수 의원은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소유의 부동산을 문제 삼았다.

특히 김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에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시절 청문회에서 국토부장관 후보였던 최정호 전 전북도 부지사에 대해 주택을 3채 보유 했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했다”며 “임대를 포함해 4채의 주택을 보유한 서경석 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그 당시 국회에서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반대한 기억이 없다”면서 “서경석 사장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농아인 권리 향상 도와야”

박정규 도의원, 5분발언서 “도내 농아인들

인구당 비율 전국 2위, 수어 통역사 절대부족

통역사 증원·복합이용공간 조성해야”



의 지회 업무까지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농아인의 수에 비해 통역사가 절대 부족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수어 통역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별도의 인력 충원이 없어 각 센터의 수어통역사들이 살인적인 스케줄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다.

박정규 의원은 8일 제39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청각장애인은 2만664명, 언어장애인은 1277명으로 그 규모는 전국에서 10번째이지만 인구당 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이처럼 농아인은 지역 장애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충분한 지원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아인의 장애 특성상 일반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타 시도의 경우 쉼터와 청각·언어 장애인 복지관 등을 조성하고 있지만, 전북의 경우 이러한 시설이 없어 이 모든 역할을 수어통역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규 의원은 “전북은 2016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 농아인들의 권리보장과 교육, 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한 15개 지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있는 곳은 단 2곳으로 수어 통역사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도 회원관리, 민원접수, 회계관리 등

/김경수 기자

도내 기초의회 2차 정례회 잇따라 개회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는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2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였다.

고경운 의장은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참사로 유령을 달리하신 분들께 명복을 빌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복도시를 만들자고 강조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세심하고 철저하게 심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학수 정읍시장의 2023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 등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최재기 의원은 5

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상투신 주변 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촉구했고, 이도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애울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의견문을 제택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의 예비 심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의 예비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체택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진행한다. 이어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순창군의회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48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3건, 2023회계연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 출연금, 공유재산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신정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을 험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미루리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과 예산안 등 심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 이성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창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제언했다.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면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방지되어 있는 자

투기방지법이나 공사 후 발생한 잔여지 등의 이용기회가 적은 공유재산은 용도폐지 후 매각 등의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또한 조정희 의원은 민선7기 및 민선8기 공약사업 현황에 대해 최영일

군수와 관계 공무원에게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했다. /김경수 기자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흥덕농협 선정 환영”

민주 윤준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8일 2023년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고창 흥덕농협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10억원,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구축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업을 생산의 효율화·규모화·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친환경농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장비를 지원한다.

또한 소비자 유통 여건 조성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공급·소비 기반 확충에 필요한 유통·가공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고창 흥덕농협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을 통해서 경축순환지원화



센터 약회자김씨 설 보완 및 드문 모심기 농법 보급 확대를 통한 친환경 농업 환경 개선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 내년도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사업의 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흥덕농협 조합장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위한 친환경농업 정책 및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7일 전주시의회를 찾았다.

전주권 광역소각 자원센터 정보 공유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전주시의회 방문

전주시의회에 전남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찾아와 전주권 광역소각 자원센터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8일 펼쳤다.

이날 최형배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비롯한 8명의 의원들 및 사무국 직원들은 전주시의회를 찾아 광역 소각자원센터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2023 순천민국제정원박람회를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방문단은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상황을 두루 살폈다.

최병래 위원장은 “전주시의 광역소각자원센터 시스템을 살펴보며 다양한 정보를 얻었다”며 “앞으로 양 의회가 각종 정보 공유와 협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순천시의회의 방문은 상호 효과적 의회 운영과 양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시·군과의 교류를 활성화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기자



신뢰받고 강한 의회 만들기 맞손’

8일 전북도의회 의장실에서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과 송상재 전북도청 공무원 노조 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뢰받고 강한 의회 만들기 맞손’이라는 제12대 전북도의회 첫 여성 의장으로 선출된 국주영은 의장에게 ‘도민과 조합원이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도의회가 행동으로 보여준 결과물이다.

“행안부장관·경찰청장 과면하라”

이태원 참사 관련… 염영선 도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도의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과면과 사퇴”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8일 제39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염영선 의원(정의당)이 대표발의한 ‘무능력·무대책·무책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과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염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충격과 아픔에 뛰눈으로 밤을 새웠고,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참사는 정부 고위책임자들의 무능력·무대책·무책임한 대응

이 원인으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112신고 이후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바”라고 했다.

염영선 의원은 “이번 참사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가 뿌리째 흔들리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미망한 책임이 있는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을 즉시 과면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김경수 기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야”

“세제 지원을”… 황영석 도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

새만금사업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세제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 2)은 8일 열린 제39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광주의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나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과 같은 세제 지원을 통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목표로 했던 것이다.

반면 새만금 입장주체는 세제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있다는 주장이다.

황 의원은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

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여전히 교통 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접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부족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영석 의원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 지원과 함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건의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경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완주군의회, 군 농어업 회의소와 소통 간담회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에 지난 7일 완주군농어업회의소에서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어업회의소는 농업과 어려운 현실과 다양한 현장 의견 50가지를 담은 ‘농민의 목소리를 들습니라는’라는 책자를 전달하며, 농업정책 방향과 농민의 권익증진,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농어업회의소는 농촌현장의 만성적인 일손부족 대책 마련과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영농폐기물 처리대책, 농지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업경영비 부담기증에 따른 농촌의 현실을 토로했다.